



# 경제통통



---

## FOCUS

- 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ZOOM IN

- 서울시, 사회적경제-사회책임조달 동반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대리점 1,864개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실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 FOCUS | 01

# 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알바청년·직장맘·고령근로자·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발간된다.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 노동 권리장전’ 4,000부를 제작해 서울시청, 민간위탁업체(다산콜센터 등)를 비롯한 각급 학교(특성화고, 대학교 등) 및 노동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

**3,900여 명의 시민과  
450여 개  
일자리제안 공유,  
실질적 일자리대책  
기반 마련**

‘서울 노동 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과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것이다.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284p)를 담았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계시간’,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 구제 절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법령부터 실제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준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노동 교육 시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 3,560만 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을 기준으로 평균 9,000만 원 정도이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는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지역의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증금 평균  
3억 3,560만 원,  
계약기간  
평균 6.1년, ㎡당  
임대료 도심이  
10만 5,800원 최고**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의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1,255호(22.3%)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 원이며 ‘강남’이 5억 5,57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이 3억 7,415만 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은 5.5년, ‘신촌·마포’는 5.2년, ‘기타지역’은 6.3년이었다. 최소 현계약기간은 1.6년(서울역), 최대 현계약기간은 2.7년(명동)이며, 최소 총계약기간은 3.8년(공덕역), 최대 총계약기간은 8.1년(청량리)이었다.

㎡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 5,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강남’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평균 1.9% 상승한 가운데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인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 ZOOM IN | 01

# 서울시, 사회적경제-사회책임조달 동반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책임조달 활성화와 발전전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4일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와 사회책임조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책임조달’은 정부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 가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여 간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구매 액수가 공공구매 총액 대비 1%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책임조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회책임조달 관련 제도과 활성화 사업 성과 및 과제 논의, 지원체계 점검



토론회 1부 주제는 ‘제도와 성과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정진우 과장(서울시 사회적경제과)의 ‘서울시의 사회책임조달 확산 정책 3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태일 과장(성북구 사회적경제과)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이철중 대표(함께일하는세상)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단의 성과와 과제’ 발표가 있었다.

2부 주제는 ‘전략기획사업’으로 ▲우승주 단장(극단날오는자동차) ‘2015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성과와 과제’ ▲김석경 대표(행복ICT) ‘함께누리몰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모색’ 발표가 진행됐다.

염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나온 해법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ZOOM IN | 02

# 서울시, 대리점 1,864개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실시

As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장(대리점)이전에 대한 승인·영업직원 채용 등록 지연·거부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본사에 직원등록을 신청했으나 8개월째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대리점 창업비용  
2억 8,600만 원,  
평균 계약기간  
1.5년, 5명 중 1명  
재계약 시 해지위협**

먼저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 계약기간은 1.5년이였다.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이르는 138명은 재계약 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683명)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674명)의 18.8%(127명)는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대리점이 반품비용을 전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는 전체 응답자(686명)의 13.8%(9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 평균 684만 3천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주들의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및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